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김태원	860513-*****	부산광역시 연제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태원	○○○○○○○○(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태원은 2020.5.29. ●●●●●●(주) '□□□ □□□□ □□□□' 등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舊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70만원

나. 유의사항

-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